

세계화, 세계화 담론 그리고 한국사회

이 상 철

(인문대 사회학과)

— 목 차 —

1. 머리말
2. 세계화의 의미
 - 2.1 자본의 논리
 - 2.2 세계화를 파악하는 관점
 - 2.3 세계화의 두 측면
3. 자본주의 팽창기의 한국
 - 3.1 제2차 팽창기와 식민지로의 전략
 - 3.2 제3차 팽창기와 한국사의 전환기
4.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현실
 - 4.1 경제
 - 4.2 정치
 - 4.3 사회문화
5. 맺음말: 올바른 인식과 대응
 - 5.1 통일과 발전의 과제
 - 5.2 현실적 대응자세

1. 머리말

요즈음 우리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은 ‘세계화’이다. 김대통령의 취임 이후 온갖 종류의 대형 사고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유행했던 담론들은 여럿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끊이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김대통령이 이 말을 강제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약 1년 전인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 김대통령에 의해 갑자기 나온 ‘세계화’는 국정외의 지표가 되면서 큰 힘을 얻었다.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한국의 독점대자본은 이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세계화는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출생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이 말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그 의미도 가지각색이다. 그 극단적인 예는, 세계화를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사로 외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세계화는 우리의 고유한 발상이라면서 영문표기를 ‘Globalization’이 아닌 ‘Segyehwa’로 한 것이다. 이처럼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말은 그만큼 더 편리한 것이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을 지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혼란이 가중되고 냉소도 확산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실제로 전개되던 세계화추세를 무시할 수 있는 부작용도 따랐다.

혼란은 일반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어났다. 학계에서도 세계화의 현상, 의미와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해 왔지만 학문 분야나 입장에 따라 상이하거나 상반되는 자의적 해석이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현재 논의의 경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실로서의 세계화를, 다른 하나는 이상으로서의 세계화를 주로 다루거나 강조하는 경향들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향들은 각각 정치경제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경쟁논리를 강조하는 것, 사회문화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공존논리를 강조하는 것과 친화성(親和性)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후자의 측면을 보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혼란을 정리하고 세계화의 의미를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 글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화란 무엇인가, 즉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 누가 세계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셋째, 세계화의 본질에 비취볼 때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넷째, 바람직한 세계화 또는 세계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2. 세계화의 의미

2.1 자본의 논리

2.1.1 자본의 운동

세계화란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이며 자본의 운동을 지칭한다.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구속도 벗어나고자 한다. 국가 경계가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면 자본은 국가범주 안에 머물거나 국가의 기능을 이용한다. 국가범주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즉 자본의 목적추구에 장애가 되면 자본은 이 경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자본이 이러한 장애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세계화 현상이다.

자본이 여러 국가를 상호이동하면서 국가간 경계를 넘을 때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정치·사회·문화 제도--예를 들면 관세·관습·법·언어--가 장애가 될 때가 많다. 그러나 상이한 제도들이 하나로 통일되면 자본이 국가간 경계를 넘을 때마다 치루게 되는 비용이 절감되며 활동은 보다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경제활동--이윤추구 또는 가치증식--을 전세계에서 동일

하게 만들고자 한다. 자본에게는 원래부터 국가 경계가 없다.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곳이든 진출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일국적 규모가 아니라 국제적·세계적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Wallerstein, 1979).

간단히 얘기하면 자본의 순환--화폐자본, 상품자본, 생산자본 등의 형태전환과 운동--이 일국의 경계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국제화이고, 관계되는 국가 범위가 광범위할 때는 세계화가 된다. 즉, 생산이나 유통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면 국제화가 되고 그 주체는 다국적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이 된다. 생산이나 유통이 그 이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때 세계화가 되고 주체는 초국적기업(T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이 된다. 세계화란 곧 자본의 세계화인 것이다.

2.12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의 세계화원리에 따라 자본주의가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전개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크게 세번의 팽창기를 거쳐왔다. 제1차 팽창기는 자본주의 발생 이후 지리상의 대발견에서 중상주의를 거쳐 산업혁명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 절대주의 왕권이 확립되고 주권국가가 형성되어 국내시장의 통일이 이루어져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절대주의국가는 이어서 국민국가--또는 민족국가, Nation-State--로 전환함으로써 근대적 정치경제구조가 완성되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국이 몇 백년 동안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다. 해가 지지 않는 세계의 공장인 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주의를 확립시켰다.

제2차 팽창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던 제국주의 시기이다. 경쟁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었고, 각국의 자본이 원료와 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대하고 더욱 철저하게 장악하였다. 영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였다. 그래서 제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결과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으로 되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그후 몇 십년간 지속되면서 자본주의 국가간 경쟁은 약화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등장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동서냉전이 전개되었지만, 세계경제는 호황과 성장을 이루었다. 호황은 1970년대 초 아랍과 이스라엘간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석유충격(Oil Shock)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3차 팽창기는 그후부터 현재 현저하게 일국 단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한 단위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이다. 현실사회주의는 붕괴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새롭게 3극체제--미국, 일본, 유럽 특히 독일 세 집단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는 체제--도 도래하였다. 선발자본주의국간의 경쟁도 격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의 붕괴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쇠퇴시키고 자본주의의 견제세력을 없애면서, 자본간의 경쟁을 노골화·전면화시켜 무한경쟁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였다. 초국적기업이 경제주체가 된 이 시기를 특별히 지칭하여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3 제3차 팽창의 배경과 원인

세계화는 자본의 운동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팽창기의 자본축적양식은 테일러주의(Taylorism)의 과학적 관리론을 계승한 포드주의(Fordism)로 귀결되었다. 제3차 팽창(세계화)은 포드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산체계가 지배적인 축적양식으로 변화해온 것에 기인한다.¹⁾ 이 변화는

1) 포드주의 이후의 생산체제와 축적양식에 대해 합의된 명칭은 아직 없다. 이론적 입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주장이 장기과동론, 유연전문화론, 신생산개념론, 조절이론 등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축적양식이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체제와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이영희, 1994: 19-47).

과학기술혁명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한 분야는 극소전자(ME, Micro-Electronics), 생명공학(Biotechnology), 신소재(Materials Science) 등이다. 이 중에서 극소전자혁명은 컴퓨터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첨단기술 전체를 복합시키고 통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물적(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교통(Computer Science,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발전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교통 발전에 의해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대폭 극복되고 세계화의 주체인 초국적기업은 세계경제를 '세계화'시킬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발자본주의국간에 융합도 하고 후발자본주의국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활용하기도 쉬웠다. 생산과 유통이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되어 새로운 국제분업체제도 형성되었다. 생산이 세계화됨으로써 초국적기업은 기업내의 국제적 분업망을 형성하여 수많은 나라를 하나의 수직적 통합체계에 묶을 수도 있다. 초국적기업은 더 나아가 '네트워크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상이한 초국적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결국 개방과 상호의존이 국가간에도 증대하는 세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생산과 유통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선발자본주의국간 경쟁이 심해졌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자본주의국도 경쟁에 동참함으로써 국제경쟁은 한층 더 격화되었다. 과학기술변화에 기초한 세계경제의 세계화는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각국의 국가경제전반, 개별기업, 노동자 등 모두에게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The Impact of Globalization, 1994). 국가수준에서는 국제적 경제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세계화된 생산체계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본유치와 생산성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축소, 노동자세력의 약화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²⁾

2) 케인즈주의에 위각한 복지국가의 후퇴는 민족국가내에서 국가의 노동역압--사회

변화는 기업수준에서 가장 심하다. 심화된 경쟁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합리화를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개념들-- Restructuring, Reengineering, Downsizing, Bench Marking 등--은 유연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시도는 크게 기술체계와 작업조직 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체계 변화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의 규모축소 및 생산체계의 유연화가 기본이다. 작업조직 변화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작업조직의 유연화, 노무관리의 유연화 및 강화가 기본이다.

작업조직의 변화는 곧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첫째, 노조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의 이익대변이 힘들어지고 사회도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둘째, 대기업 남성 사무직과 기술직 등의 정규사원 중심의 고용이 안정된 일차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여성 시간제나 임시직 등 비정규사원 중심의 불안정한 이차노동시장으로 분절이 확대되고 있다. 핵심노동자층과 주변노동자층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면서 주변노동자층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노동력의 국제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상적으로 기업(자본)의 무국적화와 세계시장의 단일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고도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발자본주의국이 축적위기에 처하자 특히 후발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분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자유경쟁과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은 언뜻보면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

보장 축소, 노조약화와 노동법 약화 등--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각국이 기업(자본) 유치를 위해 기업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세금감면, 노동비용 감소 등은 그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강화되었다. 영불간 기업(자본) 유치경쟁을 보면 '사회적 덤핑'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The Hoover Affair and Social Dumping, 1993). 국가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적 우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회복, 경제적 긴축, 사회보장의 축소를 통해 포드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프로젝트는 영국 대처주의와 미국 레이건주의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국내에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김정훈, 1995).

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발국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1993년 12월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지역(Bloc)화 현상, 초국적기업의 득세, 흑자국 책임분담론³⁾ 등의 대두는 한마디로 시장확보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현상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은 일국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간 협력 기구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시도이기도 하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일국 차원을 넘어서고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에 가깝게 되자, 유엔·국제노동기구(ILO)·유럽연합 등이 기업의 행위규준·행동지침·원리선언을 설정한 것도 세계화 현상에 맞는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Blanpain, 1993). 요즈음 정부 또는 비정부 차원의 초국적 조직, 제도 및 활동이 부쩍 증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합 기제(Mechanism)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색 중이고 진통 중일 뿐이다. 진통은 한편 세계화와 공동의 규칙이 강조되고, 다른 한편 국민경제간 경쟁과 마찰이 증대되면서 국가경쟁력이 얘기되는 모순적 현상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모순적 현상은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지방화가 진행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⁴⁾ 결국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현상

3) 흑자국 책임분담론이란 우리나라가 1980년대 말 빛년 동안 흑자를 이루자 세계최고의 적자국인 미국이 우리 시장을 더욱 개방시키기 위해 사용한 논리이다. 한국이 흑자를 이룬 것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미국이 적자를 낸 것은 그만큼 한국시장이 폐쇄적인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흑자국도 적자국의 적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시장개방을 더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리로 미국은 동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도 압력을 가한 바 있다.

4) 세계화와 상반되는 경향으로 보이는 지역화와 지방화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지역화는 두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이것을 세계화되기 위한 과정과 단계로 보는 것이다. 자본의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국단위를 넘어 우선 손쉬운 이웃에서부터 확대를 실시해 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대내적 결합강화가 대외적 배타로 흐르는 측면을 중시하고 세계화와 상반되는 경향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화에는 이 두 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길항관계를 유지하면

이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세계화를 파악하는 관점

2.21 기능주의적 상호의존

세계화를 파악하는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간 지배가 강화되고 종속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기능주의적 상호의존의 관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문호를 개방해야 서로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국가간 의존도가 증대되었다고 본다.⁵⁾ 문호를 개방할 때 자유무역주의의 비교우위론에 의해 서로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간 관계는 영합(Zero-Sum)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입장이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집권을 강화해온 선발자본주의국 보수정당의 입장과 연결된다. 영국의 대처주의(Thatcherism)와 미국의 레이건주의(Reaganism)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적극 개입하여 경기의 순환을 조정하고 복지정책을 펴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의 역할과 개

서도 장기적으로는 앞의 측면이 득세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지역화를 세계화와는 정반대라고까지 파악해서는 안된다. 지방화도 활동의 기본단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향의 동인은 세계화의 동인과 같다. 그것은 근현대 세계의 기본 구성단위인 민족국가의 영역과 역할·기능이 축소되는 것이다. 민족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한편 국가에 가려있던 지방의 이해가 표출되고, 다른 한편 국가단위를 넘어선 세계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방화는 세계화와 동일한 세계사적 추세의 다른 측면, 즉 동일한 현상의 양면중 한쪽 면이다.

5) 세계 여러 지역 사이의 상호의존성 증가는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되어가는 현상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아니지만 기든스도 세계화를 세계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현상에 대한 일반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거리가 재조정 또는 재질서화되는 것이다. 시공간(時空間)의 응축(Compression) 결과 우리의 사회적 맥락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Giddens, 1990). 결국 상호의존성 증가는 세계화의 결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의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입이 최소화될 때, 즉 모든 것을 시장기체에 맡겨 탈규제·민영화·반(反)개입을 할 때 시장의 왜곡이 없어지고 효율성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자는 점에서,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국가간 경계를 없애자는 세계화의 이치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본의 입장에 섬으로써 세계화의 주체인 초국적기업의 이해도 대변한다.

그렇지만 이 관점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간의 불평등한 역학관계와 위계를 무시하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노예주가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도 상호의존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상호의존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지배-종속관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겠는가? 세계화도 실제로는 선발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22 지배강화-종속심화

앞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 지배-종속의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선발국과 후발국의 관계가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며 잉여가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세계화도 선발자본주의국이 자본축적의 한계에 부딪치자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잉여율의 제한으로 생긴 곤경을 탈피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제적 이동은 선발국 사이만 아니라 후발국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후발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시장도 개방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는 맑시즘과 종속이론군 등을 들 수 있으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의 경계가 실제로 초월되고 있지는 않다고 파악한다. 국가는 여전히 세계정치경제의 기본단위라고 생각한다. 초국적기업도 본국에 본거지를 두어 핵심을 형성한 후 세계적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 아니다. 또 국가를 넘어선다고 얘기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민족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본국의 정치경제적 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A Survey of Multinationals, 1993). 결국 세계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본의 운동이며, 이것은 한계에 부딪친 가치증식을 새로운 시장에서 이루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관점도 한계가 있다. 지배-종속이 기본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간 단절이 가능한가? 일국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수탈당해온 후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적·구조적으로 형성되어온 관계의 단절은 국가존립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겠는가?

2.23 상호의존과 지배-종속의 변증법

위의 두 관점에는 모두 일면적 진실이 있으면서 한계도 있다(백영서 외, 1995). 실제로 세계에는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배-종속이더라도 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 한말에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쇠국주의정책을 고집하다가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주체적인 관계가 결여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자립경제의 논리에 선 관계단절로 인한 것도 있다.

결국 요체는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보완·호혜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기에 따라서 지배강화와 종속심화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선진국에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역사상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한 국가가 드물지만 있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면서 미일과의 삼각체제에 깊이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된 지금은 국내대자본의 독점은 강화

되었지만 대외종속은 미약하나마 약화되어 왔다(김형기, 1994). 냉전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공간도 확장되었다. 결국 상호의존과 지배-종속 중 어느 면이 지배적이 되는가는 선형적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 우리의 구체적 행위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일 수 있다.

2.3 세계화의 두 측면

2.3.1 상호경쟁

세계화를 파악하는 두가지 관점이 있는 것처럼 세계화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경쟁은 현실로서의 세계화를, 협력과 공존은 이상으로서의 세계화를 주로 고찰한 것이다. 실제로 세계화는 자본의 운동에 의해 추동되어왔기 때문에 세계화에는 정치경제적 힘에 의한 경쟁관계가 주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의 지금까지 논의도 이 측면에 입각하여 전개해 왔다. 세계화를 유포시킨 김대통령과 우리 정치·경제계의 인식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담론도 주로 이 측면만 중시하고 있다. 세계화를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나(공보처, 1995a) '힘있는 선진국 되는 것'(김진현, 1995)으로 파악하는 태도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쟁적 측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그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처방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지만 이 측면만 보는 것은 세계화의 또다른 면을 망각하고 현실적 힘만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국가간 힘에 의한 지배-종속관계를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자본주의국보다 힘이 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편 냉혹한 현실적 경쟁관계를 인식하여 힘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존·협력의 이상을 선발국의 힘을 견제하는 도덕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3.2 상호협력

세계화의 상호협력적 측면은 그동안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이 측면은 지구공동체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이상으로서의 세계화와 주로 관계된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경제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목소리가 미약하다. 목소리가 작은 것은 사회문화와 상호협력적 측면이 현실적으로 세계화를 추동하는 주된 동력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로 현실 정치경제적 이익에 의해 행동하는 선발국의 입장을 후발국이 이 측면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 측면 자체가 인류의 이상과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설령 우리가 중심부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이 측면을 소홀히 하면, 지금까지의 제국주의국가와 우리가 전혀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국가가 아니라 선후발국가간과 자본주의·사회주의 국가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과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상과 함께 현실적 힘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⁶⁾ 협력은 경쟁과 함께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문제는 경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협력의 이상 추구가 가능한가이다. 경쟁을 하되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협력·공존의 쟁점이 제기된 것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에 의해 국가사회간 접촉이 증대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선발국에 의한 후발국의 일방적 수탈이 한계에 직면한 탓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의 전개는 구성단위 상호간 관계(작용)의 증대, 즉 고립에서 상호관계로 진행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등장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상호작용은 급증했다. 이 상호작용은 선발국에 의한 후발국의 침략이었지만, 부수적 효과로서 상호이해가 증대하면서 더불어 살기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세계화는 국가·사회 등 인류의 사회문화 각단위간

6) 자세한 설명은 이 글 5장 맺음말을 참조할 것.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달으며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유철인, 1995). 이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이상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는 점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핵문제는 대표적인 예로서 상호의존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급증시키고 있다.⁷⁾ 정치경제의 많은 문제도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해결이 곤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상호의존적 측면이 증대되고 있다고 얘기되는 것처럼 다른 한쪽에 지속적인 손실을 끼쳐서는 관계의 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초국적 제도나 조직의 증대, 초국적기업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제시, 1995년 초 멕시코 폐소화(貨)의 급락에 따른 세계경제 파동은 정치경제에서도 공존과 협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협력과 공존은 인류의 이상이지만 글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 자본주의 팽창기의 한국

3.1 제2차 팽창기와 식민지로의 전락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7)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관계가 의존적이고 긴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인 예로서는 환경과 핵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립된 일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이며, 한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 점에서 세계화는 상호작용이나 의존이 증대되었다는 결과로서보다, 상호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과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김경동, 1994). 1992년 리우 세계환경회의는 작지만 그러한 인식의 첫걸음이다. 최근 프랑스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전세계의 항의는 그 두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제1차 팽창 때 우리는 국제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19세기 중반이후 서양에서 관계수립을 요구해오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제2차 팽창이 시작될 때 고립주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속되어온 쇠국주의는 우리를 우물안의 개구리로 만들어 세계정세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했다. 소중화(小中華) 사상은 우리의 바깥을 멸시하도록 해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했다. 농민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혁명운동은 기득권층과 수구파의 완강한 저항과 외세의존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현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을 외면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는 그 결과가 잘못된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맞이했던 해방공간에서도 나타났다. 미소, 나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에 따른 세계정세변화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우리는 외세에 의해 또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아야 했다(박명규, 1994).

한말과 해방공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현실 세계추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과 이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국제관계도 관계의 단절이나 고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한 역학관계는, 그 본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때에야, 그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아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3.2 제3차 팽창기와 한국사의 전환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제3차 팽창은 지금이 바로 세계사적 전환기임을 뜻한다. 축적양식의 변화, 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따른 국제정치와 사회의 변화는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도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나 탈산업사회라는 용어는 이것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서기(西紀) 백년 단위와 천년 단위가 중첩된 전환은 사람들의 감정적 분위기마저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사적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의 전환기도 겹친 중차대한 시기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자본주의는 지금 앞뒤로 장애에 부딪쳐 있다. 앞에는 선발국의 기술이전 회피와 시장개방 등 제반 압력이 있고, 뒤에는 우리보다 산업화에서 한발 늦은 개도국이 추격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선발국을 추격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 개도국에 의해 따라잡히느냐는 기로에 있다. 정치적으로도 독재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 29선언, 개헌과 16년만의 대통령직선,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의 출범에 이은 제반 개혁조치와 후퇴 및 대형사고 등은 과도기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민주화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세계추세 변화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쉽게 되고, 그 반대면 또다시 탈락할 가능성이 큰 시점이다. 국제정세에서도 냉전이 종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통일을 달성하기가 좋은 시기이다. 이 기회를 놓쳐 분단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면 중심부로의 진입이나 국제무대에서의 독자적 위상정립이 상당기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은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여 반주변부와 중심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분단과 통일의 제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기이다. 즉 세계사적 전환기와 한국사의 전환기가 겹침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같이 맞고 있다. 새로운 도전은 곧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갖고, 세계화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준비를 하고는 있는가? 준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세계화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추세에 대응한 전국민적 차원에서의 힘 결집일 것이다. 이 점에서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4.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현실

4.1 경제

과학기술혁명을 기초로, 자본축적양식이 변화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세계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 시초부터의 현상이긴 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경제의 탈물질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과학지식, 하이테크, 정보통신,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자본수출 패턴도 상품자본, 금융자본, 생산자본의 순서로 진행되어 오다가 자본의 이동이 훨씬 자유롭게 되어 요즈음은 파생금융상품이 활개치고 있다. 이 시대의 주역은 초국적기업이다. 지리상의 대발견 때처럼 정복자의 재도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동종 또는 이종끼리 상호결합(매수합병)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해서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자본의 활동을 제한할 장벽은 계속 무너져가고 결과적으로 무한경쟁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거나 다른 한편 최소한의 규제라도 하기 위해, 초국적 제도·조직·운동도 증가하는 모순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과 현상은 우리 한국사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해방후 냉전체제가 시작될 때 한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것은 경제적이러기 보다 정치군사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한국은 신국제분업의 세계체제에 경제적으로 깊이 편입되었다. 우리는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기초로 해서 원료·기술·자본·시장은 해외에 의존하면서 고도성장을 추구해왔다. 이 과정은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가를 적극적으로 창출·육성하고, 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1970년대 들어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재편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의해 국제분업체제에서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부문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선발국의 압력,개도국의 추적, 노동운동의

고양 등으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경제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에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만 하는 시점을 만났다. 이에 대한 대응은,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통제의 재강화 시도로, 국제적으로는 시장다변화와 자본수출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다변화는 미일의존도를 약화시키면서 수출장벽을 넘으려는 것이다. 자본수출은 두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독점대자본의 경우는 선진자본주의국을 대상으로 시장접근도를 높이려는 것과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려는 것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자본은 국내노동비용 상승을 피해 개도국으로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간 것이다. 그것조차 불가능한 소영세자본은 국내에서 저임 외국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로 진출하는 반면에, 선진자본주의국의 압력에 의해 국내의 자본·상품 시장개방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한국 경제는 산업화 초기부터 세계화를 시작했으며 그 경향은 최근에 가속되고 있다.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계화를 우리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세계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현실정이다. 자본, 특히 독점대자본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는 국가, 국민일반 및 노동에 대해 전개되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모든 것을 시장기계에 맡기라는 요구에서 잘 나타난다. 국가개입은 시장기계를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그동안 주로 국내활동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업활동의 국경철폐'까지 촉구하고 있어 자본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의 세계화와 해외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점"이라는 것이다(한겨레신문, 1995). 그러나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에는 다른 면이 숨어있다. 그동안 자본은 국가에 의해 창출

·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제는 독점대자본의 힘이 커져 이미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절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국가개입 없이 시장기체에 맡겨놓으면 자신들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숨은 의도이다. 국경철폐 요구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초국적기업의 수준까지 성장한 극소수 독점대자본의 이해일 뿐인데 마치 모든 기업, 국가 및 전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독점대자본은 세계화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자본(기업)의 이익과 국가·국민의 이익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 '활동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지말고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이윤을 보다 많이 획득하여 경쟁력도 제고시키며,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노동에 대해서도 이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기업에 나쁘고 노동에게도 나쁘며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노동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에 강제 귀속시키고자 한다. 결국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의 주인공은 자본이고, 자본의 이익이 곧 국가·국민·노동의 이익이라는 것이다.⁸⁾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에서 자본의 헤게모니 강화에 기여한다.

8) 세계화의 주인공으로, 국가경계발전의 주역으로 자본 스스로를 이미지화하는 시도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류화·세계화·기술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자본들이 내세우는 다음과 같은 구호는 그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삼성의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현대의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LG의 '경영의 글로벌화', 대우의 '세계경영', 선경의 'SUPEX(Super Excellent Level)'. 이러한 이미지는 더 나아가 자본의 이해가 국가와 국민의 이해와도 일치한다는 느낌까지 갖게 만든다. 지난 얘기지만 1993년부터 급증한 경영혁신 구호와 운동도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이것이 노동의 입장을 위축시키고 있었지만, 기업이 잘 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국가도 잘 되자는 논리여서 노동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경영혁신' 또한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노동과 일반국민을 자본의 헤게모니에 포섭하는 기능이 있다. '이전회 신드롬'은 그러한 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최대룡, 1994).

자본의 헤게모니 장악시도는 이미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출마하고 대우 김우중회장이 출마를 검토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이것이 세계적 기준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힘든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독점대자본은 중소자본과도 보완관계에서 협력을 추구하기보다 일방적인 지배와 영역침입을 일삼아왔다. 이들로부터의 잉여수취를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해왔던 것이다.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업종전문화는 빈말일 뿐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요구도 독점대자본 강화와 중소자본 약화의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진입은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본에게 타격이 집중되기 쉽다. 시장개방은 독점대자본 위주의 산업자본의 1, 3차산업과 업종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조성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독점대자본은 기술투자와 합리적 경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정격유착, 토지투기, 저임노동력 등이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특히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국인노동자와 해외진출기업에서도 악명이 높다.⁹⁾ 이러한 경제현실은 세계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전국민적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조건과는 동떨어져 있다. 세계화는 자본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2 정치

세계화는 개별 민족국가의 영역,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국가의 공동화라는 말을 나오게 하고 있다. 또 국제관계에서 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경제가 우위에 서면서 정치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

9) 이견회 신드롬을 일으키고, 세계화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삼성과 이견회회장이 금년 봄 독일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직장노동자평의회'를 인정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사건이 있다. 이것은 삼성과 이회창, 더 나아가 자본이 세계화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화되었다.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자본에 대한 민족국가의 위상도 저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자본)의 활동에서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여 국제적·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도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구유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분쟁은 단적인 예이다. 이리하여 경제영역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정치영역에서도 초국적 제도·조직·기구·활동이 증대되는 세계화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UN·EU·선진7개국정상회담 등 정부차원 외에, 비정부차원의 시민사회 수준에서도 조직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자본유치, 노동통제, 실업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기능이 부분적으로는 강화되는 모순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¹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왔다. 반도라는 성격은 자체의 힘이 미약할 때 전통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되기 쉬웠다. 이에 덧붙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최전방 역할도 맡았다. 그래서 국제관계의 영향력을 첨예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관계 망과 역량은 극도로 위축된 모순적 현상이 나타났다. 냉전이 해소된 지금은 국제관계의 망과 역량을 확대시키기에 좋은 기회이다. 노전대통령 시절의 이른바 북방정책은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유엔 가입, 외교 확대와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진출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뒷받침한 또다른 것은 경제성장에 의한 한국의 국제경제 위상 상승이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세계화 경향이 지속되는 신호일 것이

10) 세계화가 민족국가 영역의 축소라는 의미를 동반하는데, 김대통령이 민족국가 기능을 확대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하지만 세계화 자체가 국가영역의 전반적 축소와 부분적 기능강화를 모순적으로 동시에 진행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보면(김정훈, 1995), 김대통령의 경우는 이를 회화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다.

그렇지만 국내의 정치현실은 세계화추세나 세계적 수준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하다. 김대통령이 세계화를 들고나온 것도 우리 정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이데올로기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과거와는 달리 헤게모니 없는 '물리적 통제'를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¹¹⁾ 유신과 5공 시절 맹위를 떨치던 군·경찰·안기부 등 물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이선으로 물러났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일선에서는 이데올로기적 활동이 강화되었다. 김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신한국건설, 변화와 개혁, 신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앞에서 쓰던 구호의 효과가 약화된 것이다. 새로운 구호의 필요성 때문에 국제화를 얘기하고 또다시 세계화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실, 1995: 68-75). 셋째, 냉전 해체후 '반공'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큰 이데올로기 효과를 가지지 못하므로, '북한'이라는 대상 대신에 새로운 '적(敵)을 찾아야 국내의 내적 통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적은 곧 무한경쟁의 냉혹한 '세계'이다. 이 세계를 향해 앞장서서 뛰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로 비난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활동과 사회운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동원하며, 문민정부 이전 특히 6공과의 단절(차별성) 효과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구호는 언술적 차원에서 현정권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국민동원을 의도한 '의사'헤게모니적 지배 시도이다.

그렇지만 이 시도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문민정부 출범

11)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과거에도 중요성이 컸다. 그래서 이승만정권에서는 북진통일, 박정희정권에서는 조국근대화와 반공, 전두환정권에서는 정의사회구현과 복지 등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5공 때의 구호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세계화'는 현실과의 괴리가 적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효과가 클 수 있었으나, 구호를 너무 남용·오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냉소를 조장하여 효과가 약하다.

후의 행적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현정권은 초기에는 일정한 정치개혁을 실시하였다. 공직자 재산등록, 이른바 '정치군인'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다.¹²⁾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를 중간층 등으로부터 고립시켜 배제하는 이른바 '두개의 국민' 전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민정부라는 오만 때문에, 명동성당과 조계사까지 진입하여 농성중인 한국통신 노동자를 연행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삼자 개입금지' 등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국제인권규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두개의 국민전략은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역주의와 지역분할 구도에 기초했던 그간의 정치가 지난 6월 지자체선거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역주의는 김대중씨의 '지역동권론'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정당화'까지 되었다. 두개의 국민전략은 남북한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단은 여전히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가깝게 보이던 통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안법도 여전히, 진보정당과 개혁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악화는 되었지만 국가가 여전히 시민사회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며 발전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정치는 4류'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요컨대 우리의 정치현실은 세계화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화는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4.3 사회문화

세계화는 경제가 중심이지만 사회문화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12)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금융실명제 등의 조치는 국민일반에게 유익하지만 기업(자본)의 경제외적 비용을 절감하고 활동기반을 강화시키는 자본지원의 효과도 있다. 상대적으로 독점대자본에게 가장 유리한 세계화를 김대통령이 주창한 것은 이 정권이 경제적·계급적으로 대자본과 차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 점에서 세계화주창은 자본을 위한 또다른 개혁조치일 수도 있다.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의 변화가 이와 관련이 있는 사회문화의 제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에도 경제의 중요성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문화 자체가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시공간의 응축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사회문화가 이제 더이상 격리된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즉각 다른 사회에서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회문화의 측면에서도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후발국의 사회문화도 독자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질서에도 정치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학관계가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제국주의적 현상이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보화에서도 선후발국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욱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수준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사회문화 세계화의 물질 토대도 일차적으로 정보통신의 발전이다. 세계경제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도 상호작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 기초한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를 급부상시키고 일국의 사회문화양식이 타사회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매체 메시지(Media Message)와 사회문화적 양식의 국제적 이전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초고속도로가 완비되면 그 경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국사회도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에 기초한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해 다른 사회문화의 일은 즉각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걸프(Gulf)전의 안방 시청, 미국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의 한미 동시개봉, 미국 프로농구(NBA)가 우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표적인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인터넷(Internet) 사용이 본격화되면 그야말로 '국경'은 사라지고 '세계'만 남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인간사회와는 전혀 판판

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한상진, 1995: 61-72). 세계공통의 규범인 네티켓(Netiquette)이 네티즌(Netizen)만 양산할 수도 있다. 문화접변이 신속해지고 다양하게 되는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은 인적 교류, 즉 노동력이동과 해외관광의 급증 탓도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적 지배현상, 문화적 제국주의 현상이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하다. 쌍방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와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경도된 문화접변'(Tilted Acculturation)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라는 점은 상정적이다. 정치경제에서의 불균등현상이 사회문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사회문화의 세계화도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겨냥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술에서는 '세계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에서는 정반대의 경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의미의 세계화는 사회문화에서도 쌍방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이 꽃피는 문화국제주의를 의미할 터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는 그 반대인 뒤틀린 현상은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한다. 여기에서 세계화를 내세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깥'을 보라면서 내적인 통합을 겨냥한 것이다. 밖을 강조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호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우리가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은 세계화시대에는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해야 할텐데, 반대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단일민족임을 자랑하고 타민족을 멸시하는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상태나 분단상황에서는 저항민족주의가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골목에서 놀다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김상기, 1993).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삶의 질’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이므로 삶의 질을 세계화하겠다고 하지만(공보처, 1995b), 정부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두개의 국민전략은 언술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요컨대 세계화구호는 현정권에 이질적인 요구를 잠재우고 기존체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갖는다.

우리 사회문화 현실이 세계적 기준이나 세계화추세와 거리가 먼 점은 삶의 질 문제외에도 많다. 아니 사회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혼재하여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지배적이다. 말로는 근절을 외치지만 각종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우리사회에 근대성과 합리성이 크게 결여되어 중심을 이루지 못한 것이 근본이유이다. 근대성과 합리성의 결여는 보편적 가치 추구도 미약하게 하여, 대외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사대와 약소국가 멸시의 이중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계급 계층, 지역, 세대, 성별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전국민적 차원의 힘결집을 저해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사회의 현실은 세계화추세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다.

결국 세계화구호는 현정권의 출범초기에 제시되었던 ‘민주화’구호를 잠재우고, 국가경쟁력 강화구호는 ‘변화와 개혁’구호를 약화시킨다. 우리 ‘외부’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소홀하게 해서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게 하거나 외부문제로서 호도한다. ‘세계화’는 수구논리로서 지배이데올로기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는 변화, 새시대 적응과 세계진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갖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화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5. 맺음말: 올바른 인식과 대응

5.1 통일과 발전의 과제

구호로서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가 현재 한국사회 담론에서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또는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세계사적 추세에 전국민이 대응하는 자세는 긴요하다. 왜냐하면 세계화 구호가 완전한 허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엄연히 현시기의 세계사적 흐름이므로 우리는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¹³⁾

대응은 첫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여 우리의 근대적 과제를 완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민주',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립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는 계급계층간, 지역간, 기업 규모간 등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는 통일의 길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길은 남북간 화해와 공존을 시작하여, 협력으로 나아가고, 다시 통일로 도착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적대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으로, 다시 경쟁적 공존에서 협력적 공존으로, 또다시 협력적 공존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수행될 때에만 우리는 전국민적 차원에서 힘을 결집하여 세계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화구호로써 근대적 과제를 호도하거나 완결하지 않으면 그 세계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세계화 속에 통일민족국가의 과제를 소멸시키거나 방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근대적 과제를 냉전체제가 아닌 세계화 속에 포괄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하여 진보성을 담지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통일민족국가를 이루는 과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긴장과 갈등 완화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일

13)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는 세계화가 선발국 자본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그들의 지배강화를 위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지만,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그 추세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은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체제에서 평화심기의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그럴 때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냉전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고, 해양·대륙세력간 및 자본주의·사회주의세력간의 완충·조정 장치로 기능하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선후발국간 중간조정 또는 매개역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적기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제2차 팽창기에서처럼 또다시 탈락될 것이다.

우리의 중간자적 위치는 세계경제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거나,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술, 중위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이전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식의 트랙터가 아니라 한국식의 경운기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국적기업이나 선발자본주의국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로 인한 프레온가스 사용규제를 기술제공 요구로 역이용하는 논리와 주장이 가능하다. 선발국이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외에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체물질의 시장확대도 의도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도 환경문제를 핑계로 녹색기술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종속이 약화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위치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5.2 현실적 대응자세

세계화추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세계화를 자본과 국가가 지배이데올로기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이들을 전국민이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민주화와 개혁을 적극 요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화와 개혁이 전제되어야만 한국사회의 제 측면에서 근대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만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며, 전국민적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와 개혁이 국가경쟁력 제고

의 참된 기초이다. 민주화와 개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본규모간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독점대자본의 왜곡된 소유·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¹⁴⁾ 인력정책과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자발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박준식, 1995). 북한에도 적극적인 경제협력력을 실시하여 남북한간 산업이전과 보완효과를 높이고, 통일비용을 낮추어가며, 역내 발언권도 키워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화, 지역주의 극복, 제도개혁 등이 요구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국가간 일방적이 아닌 쌍방교류가 필요하고, 세계화 언술과 실제의 괴리도 없애야 한다. 근대적 가치와 합리적 관행이 뿌리를 내리고 복지수준도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 담론을 역이용해야 한다.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운동을 지칭하는 경제적 현상이므로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수훈, 1994). 그러나 자의적 사용과 혼란이 이루어진 요즘에는, 세계화 구호를 무시하거나 능가하는 구호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역학관계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판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리의 역이용은 국내적으로는 참된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 세계화 하자. 그러나 참된 세계화를 하자. 한국의 현실을 세계의 보편적 가치, 세계적 수준, 세계화의 기준과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경쟁논리 외

14)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이것은 관료와 정치의 힘만 강화시키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완화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쉽게 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개별자본으로서의 담당하기 힘든 각종 사회간접자본들,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개발, 자본간 및 노사간 갈등의 조정 등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필요한 개입은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중심의 협력적 측면도 같이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자본과 국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전국민, 특히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주체로 나서야 한다. 시민부문 단체와 운동, 노동단체와 운동 등이 주체로 나설 때, 세계화구호의 남용·오용이 방지되고 전국민적 차원에서의 동원과 힘결집도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적극 대응을 국제적 차원에서도 전개하여 비정부 기구(NGO) 등을 통한 세계 시민과 노동자의 협력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세계화추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계로 향하고, 세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측면과,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측면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송두울, 1995).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 바, 대내적 균열을 극복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평화를 심는 것이다. 분단된 우리에게는 민족적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적극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가치로서의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정치경제적 측면의 경쟁논리 외에 인류의 이상인 공존과 협력논리로서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적극적 대응자세 외에, 더불어 살려는 자세, 보편성 속의 특수성 추구 자세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사는 자세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인권)을 존중하며, 관용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국가, 다른 문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다른 한편 우리의 것도 긍지를 갖고 키워가는 자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외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판단, 평가, 대응의 기준이 상이해서는 안된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면서 내집단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는 교정이 필요하다. 이중도덕(Dual Morality) 상태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집단의 결함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내외집단 모두에게 보편적 원리(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배타

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국내 화교와 재일동포의 상태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성 속에서의 다양성 또는 다양성 속의 보편성은, 서로 이질적인 사회도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 원리와 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변증법적 인식에 기초할 때, 특수성(한국)과 보편성(세계)을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확대적, 상호규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현재 또는 미래사회에 적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직된 사고나 경직된 사회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 유연성이 의식과 사회구조 모두에서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인식과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을 의미있게 이용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보처(여론국), “대통령의 세계화구상”, 1995a.
-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1995b.
-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 1994.
- 김상기, “전통문화와 보편성의 문제”, 월간중앙, 1993년 11월호.
- 김정훈, “세계화, 포스트 포드주의, 국민국가의 구조변동”, 동향과 전망, 1995년 가을호.
- 김진현, “세계화는 힘있는 선진국되는 것”, 제민일보, 1995. 6. 2.
- 김형기,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특질과 전망”,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 1994.
- 박명규, “국제화, 지역화속의 한국사회: 역사적 접근”, 경제와사회, 1994년 여름호.
- 박준식, “노동의 진진은 멈추었는가: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한 재검

- 토”, 창작과비평, 1995년 가을호.
- 백영서 외, “좌담: 근대성의 재조명과 분단체제 극복의 길”, 창작과비평, 1995년 봄호.
- 송두울, “분단현실에의 인식론적 접근”, 창작과비평, 1995년 봄호.
- 유철인, “세계 관용의 해”, 제민일보, 1995. 4. 15.
- 이수훈,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사회연구 8, 경남대 사회학과, 1994.
- 이영희,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서울: 한울, 1994.
- 최태룡, “경영혁신운동의 계급적 함의”,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서울: 한울, 1994.
- 한겨레신문, 1995. 10. 17.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실, “‘신경제’ 2년의 평가”, 동향과 전망, 1995년 봄호.
- 한상진, “정보사회에서의 공동체의 변화”, 경제와사회, 1995년 가을호.
-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 Press, 1990.
- A Survey of Multinationals: Everybody’s Favorite Monsters, *The Economist*, March 27, 1993: 4-20.
-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 R. Blanpain,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Blanpain & Engels, eds.,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5th edition), 337-352, Deventer: Kluwer, 1993.
- The Hoover Affair and Social Dumping,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Review* 230, March 1993: 14-20.
- The Impact of Globalization, *The Worklife Report*, vol. 9, no. 4, 1994.